

## 딥페이크 대응 R&D 민·관 실무협의체 발족

- 과기정통부, 성평등부·방미통위·경찰청·국과수와 딥페이크 기술적 대응에 협력
-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대응 R&D 성과 연계·확산 체계 구축
- 딥페이크 생성억제·정밀탐지·차단 등 전주기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착수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딥페이크 피해 예방·대응을 위한 R&D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, 관계부처,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, 민간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는 「딥페이크 대응 R&D 실무협의체」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4월 30일 개최하였다.

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나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춰 딥페이크 대응 R&D를 추진 중이다. 이에, 정부는 각 기관이 추진 중인 R&D를 연계·협력하고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·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·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.

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성평등가족부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경찰청,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기관, 정보통신기획평가원(IITP),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, 인공지능안전연구소(AISI), 한국전자기술연구원(KETI) 등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, 카카오, 네이버 등이 참석하여 딥페이크 분야 R&D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, 연구성과의 실증·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참석자들은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개발·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, 현재 개발 중인 R&D 성과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, 허위조작 콘텐츠 판별 등 범죄 대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
민·관 실무협의체는 향후 매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, 각 부처·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, 이를 차년도 연구과제와 신규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.

한편,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(IITP)은 딥페이크 ▲변환억제부터 ▲정밀탐지, ▲유통차단 지원, ▲데이터 확보·검증까지 전주기 대응을 위해 ‘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기술개발 사업’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으로, 동 사업은 최근 과제를 수행할 산·학·연 컨소시엄 선정을 거쳐 본격 착수하였다.

< 「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기술개발」 주요 내용 >

- **(개요)** 디지털 사회에 만연한 유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변환과 확산에 대응하여 안전한 디지털 신뢰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
- **(기간)** '26~'30년 / **(사업비)** 총 300억원 ('26년 30억원)
- **(주요내용)** 유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**변환억제 기술부터 정밀탐지, 유통차단 지원, 데이터 확보·검증까지 전주기 대응** 기술개발 지원
- ※ ('26~) 딥페이크 변환억제, 정밀탐지 / ('27~) 유통차단 지원, 데이터 확보·검증
- **(주관기관)** ①(변환억제)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②(정밀탐지) 한국전자기술연구원

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“딥페이크를 만드는 기술이 정교해지는 만큼,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적인 대응과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” 면서, “관계 부처·기관이 참여하는 민·관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R&D 성과를 연계·확산함으로써, 유해 딥페이크 콘텐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두원 (044-202-629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희 (044-202-6295)
			주무관	이희지 (044-202-6294)